

제 2 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 제1절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제도 확충
- 제2절 대북정책추진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

제2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정부는 남북관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변화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북 투자와 남북간 왕래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비 등을 통하여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적 관리 역량을 확충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유관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1절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제도 확충

2008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절차 간소화 및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교류협력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개선하여 확대·발전된 교류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정(1990.8.1)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변화된 남북간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7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중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정부는 법안 폐기에도 불구하고 동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08년 5월부터 이미 제출하였던 법안을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08.5.8~27), 추가 입법예고(2008.7.31~8.19), 규제개혁위원회(2008.8.25~9.1) 및 법제처(2008.9.11~10.20)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10월 30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 발전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 방북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승인한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 방북승인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도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절차 중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남북간 교역대상을 S/W,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밖에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벌칙 및 과태료 대상을 조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목적 | 주요 내용 |
|-------------------|---|
| 행정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방문절차 : 일부 남북간 직접왕래자의 방문승인 면제 ○ 북한주민접촉신고 : 접촉신고 면제근거 마련 등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등 |
|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상황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
|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조사권 신설 ○ 벌칙·과태료 대상 조정 |

2. 「남북협력기금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의견수렴(2008.5.23~6.13) 및 입법예고(2008.6.24~7.14)를 실시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10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어 2008년 12월 2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금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선정단계에서 객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간단체의 기금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정부재량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손실보조제도'의 명칭을 제도의 취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변경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개정 목적 | 주요 내용 |
|-----|--------------|---|
| 시행령 | 기금지원의 객관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용도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교류에 필요한 경비, △인도적 목적의 북한주민 구호, 개발지원, △북한 비핵화 소요 비용,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
| | 기금사용의 책임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환수 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 △해당 목적외 용도로 기금 사용, △법령 규정 위반시 기금 환수 가능 ○ 불복절차 규정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비핵화 계정' 설치 근거 마련 ○ '손실보조'를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명칭변경 |

| 구분 | 개정 목적 | 주요 내용 |
|------|-------------|--|
| 시행규칙 | 기금지원 투명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지원 등의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을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남북교역·경협보험 가입절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보험계약 한도 등을 결정하면, 사안별 계약체결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기금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18)을 개정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2008.12.31)을 개정하여, 복잡·다양한 기금지원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기금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관리심의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연장기간 축소, 보험계약 변경사항 세분화 등 교역·경협보험의 처리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교역·경협보험 처리지침」(2008.12.31)을 개정하였다.

기금 관련 하위규정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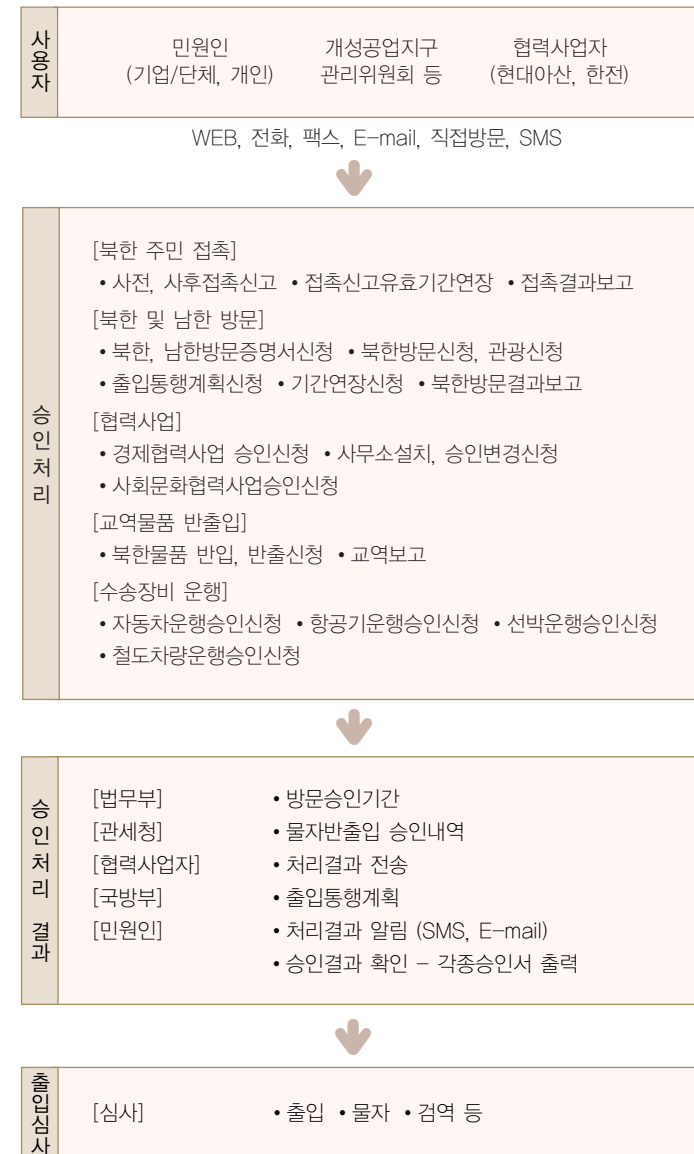
| 구분 | 주요 내용 |
|------------------------------|---|
|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체 연 1회 지원 원칙,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시 ○ 남북협력기금사용결과보고 제도화 |

| 구분 | 주요 내용 |
|--|--|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008.1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체 연 1회 지원 원칙,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기준 명시 ○ 예외 취급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의무화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2008.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지원절차, 기금 집행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합, 공통 규정 마련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명문화 ○ 교역·경협보험 관련 제도 운영방식 변경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
| 경협·교역보험취급기준 (2008.12.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처리절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연장기간 축소(10년→5년), 보험계약 변경사항 세분화 및 처리절차 간소화 ○ 교역·경협보험 용어 변경 |

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추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북한주민접촉신고, 북한방문증명서신청,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협력사업승인신청, 교역물품반출입승인신청 등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승인·처리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부터 가동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남북 교역량, 방북자, 통행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방북자들의 방북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차량 출·도착 보고서를 생략하는 등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교류협력시스템 업무 흐름도



또한 2008년에는 2단계 개선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의 자체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가 출입통행 신청시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온라인 출입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중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방북교육 이수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연계하였다. 이 밖에 차량심사 단축을 위한 RFID시스템 설치(동해선), 방북증 개선사업 등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제2절 대북정책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2006년 1월 27일 설치되었으며, 통일

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간위원 9명중 7명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대상의 간담회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상생공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2년 임기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기 민간위원 9명이 위촉(2008.12.27)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총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8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49개 안건을 심의하여, 46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5월에는 부처간 실무적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여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

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체회의 4회, 실무협의회 7회를 개최하여 해외 탈북자 보호방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개선방안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적응교육, 취업, 사회복지, 지역사회 정착 등 정부업무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이 조성된 이래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4조 3,964억원, 민간출연금 24억원, 공자기금예수금 4조 4,848억원, 운용수익금 4,487억원, 기타 수입금 375억원 등 총 9조 3,699억원이 조성되었다.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조정 등으로 인해 총 133개의 사업에 2,312억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008.12.31 기준)

| 구 분 | 정부출연금 | 민간출연금 | 공자기금 예수금 | 운용수익 등 | 계 |
|------------|------------|-------|-------------|---------|------------|
| 남북협력 계정 | 4조 3,964억원 | 24억원 | 1,130억원 | 4,536억원 | 4조 9,654억원 |
| 경수로계정 | — | — | 4조 3,718억원 | 327억원 | 4조 4,045억원 |
| 합 계 | 4조 3,964억원 | 24억원 | 4조 4,848억원 | 4,863억원 | 9조 3,699억원 |

인적왕래와 관련하여 북한현지 체험학습 등 3건에 대한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2008년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32억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 4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8건 38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건설사업 180억원, 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사업 1억원 등 4건 182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34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52억원 등 71건 587억원이 집행되었다.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지원 438억원 등 총 18건 1,101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교역·경협자금 대출,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등 유상지원의 경우 29개 사업에 총 366억원이 집행되었다. 교역·경협자금 대출은 총 22건 108억원(교역자금대출 17건 78억원, 경협자금대출 5건 30억원)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98억원 등 총 7건 258억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괄호안은 기금사업 건수

| 구 분 | | | 자금 종류 | 91~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 남 북 관 계 발 展 사 업 | 경 상 사 업 | 남북 사회 문화 교류 | 인적왕래 지원 | | 277 | 253 | 23,686 | 1,142 | 1,056 | 3,786 | 5,289 | 1,698 | 2,721 | 39,907 |
| | | | | (1) | (1) | (9) | (3) | (7) | (13) | (12) | (17) | (3) | (62) | |
| | | 사회문화 협력지원 | 980 | 637 | 102 | | 654 | 3,098 | 7,468 | 7,375 | 6,908 | 3,847 | 31,069 | |
| | | | (3) | (1) | (1) | | (2) | (10) | (18) | (20) | (18) | (8) | (70) | |
| | | 인도 적 사업 | 이산가족 교류지원 | 986 | 2,830 | 1,299 | 2,029 | 2,996 | 3,158 | 13,289 | 9,908 | 26,918 | 18,241 | 81,653 |
| | | | (3) | (5) | (5) | (6) | (6) | (5) | (7) | (6) | (9) | (4) | (37) | |
| | | 인도적 지원사업 | 260,827 | 97,737 | 97,615 | 122,585 | 150,134 | 122,547 | 186,621 | 212,536 | 227,193 | 59,694 | 1,537,475 | |
| | | | (13) | (9) | (25) | (30) | (36) | (46) | (52) | (60) | (96) | (70) | (338) | |
| | 남북 경제 협력 | 경제분야 협력 기반조성 | 4,882 | 14,578 | 89,850 | 36,789 | 76,318 | 76,033 | 204,475 | 152,091 | 172,540 | 110,074 | 937,629 | |
| | | | (1) | (1) | (1) | (5) | (6) | (9) | (18) | (23) | (28) | (18) | (56) | |
| | | 교역경협 보험 | 1,268 | | | | | | | | | - | 1,288 | |
| | | | (1) | | | | | | | | | (-) | (1) | |
| | 기타 | 사회문화 분야협력 기반조성 | | 1,416 | | | | 62 | | | | | 1,478 | |
| | | | | (2) | | | | (1) | | | | | (3) | |
| 경상지원 합계 | | 268,943 | 117,474 | 189,118 | 185,088 | 231,243 | 205,954 | 415,639 | 387,199 | 435,256 | 194,578 | 2,630,479 | | |
| | | (21) | (19) | (33) | (50) | (53) | (78) | (108) | (121) | (167) | (103) | (567) | | |
| 옹 자 사 업 | 인도적사업 (옹자) | | 86,740 | 18,955 | 96,743 | 156,088 | 101,982 | 179,262 | 3,939 | 140,479 | - | 784,199 | | |
| | | (1) | (1) | (1) | (2) | (1) | (2) | (1) | (1) | (-) | (6) | | | |
| | 교역경협 사업 자금대출 | | 500 | 46,072 | 36,157 | 18,710 | 37,377 | 29,311 | 47,910 | 56,631 | 10,807 | 283,475 | | |
| | | (1) | (10) | (8) | (31) | (76) | (51) | (50) | (43) | (22) | (256) | | | |
| | 남북 경제 협력 (옹자) | 교역 자금 대출 | | 500 | 1,072 | 390 | 7,933 | 13,677 | 8,259 | 7,327 | 8,288 | 7,834 | 55,280 | |
| | | (1) | (9) | (5) | (29) | (64) | (37) | (27) | (21) | (17) | (210) | | | |
| | | 경협 사업 자금 대출 | | | 45,000 | 35,767 | 10,777 | 23,700 | 21,052 | 40,583 | 48,343 | 2,973 | 228,195 | |
| | | | (1) | (3) | (2) | (12) | (14) | (23) | (22) | (5) | (46) | | | |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괄호안은 기금사업 건수

| 구 분 | 자금 종류 | 91~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합계 |
|-----------|-------------------------|-----------|---------|---------|---------|---------|---------|---------|---------|---------|---------|-----------|
| |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 67,523 | | | 30,582 | 35,965 | 43,974 | 27,520 | 23,065 | 83,369 | 25,820 | 337,817 |
| | | (1) | | | (1) | (2) | (3) | (5) | (3) | (5) | (7) | (11) |
| | 옹자지원 합계 | 67,523 | 87,240 | 65,027 | 163,482 | 210,763 | 183,333 | 236,093 | 74,914 | 280,479 | 36,627 | 1,405,491 |
| | | (1) | (21) | (44) | (60) | (35) | (80) | (58) | (54) | (49) | (29) | (273) |
| 대북 경수로 사업 | | | 325,936 | 300,284 | 300,883 | 328,745 | 86,984 | 22,678 | 8,883 | | - | 1,374,393 |
| | | | (1) | (1) | (1) | (1) | (1) | (1) | (1) | | (-) | (1) |
| 총 계 | | 336,465 | 530,650 | 554,428 | 649,454 | 770,751 | 476,273 | 674,409 | 470,995 | 715,734 | 231,205 | 5,410,364 |
| | | (22) | (22) | (45) | (61) | (89) | (159) | (167) | (176) | (216) | (132) | (841) |

2.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집행 심의·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정비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기금집행 심의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였다.

기금심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종전의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정부 부처간의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토의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의 사전 협의기구로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

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 안전 관련 부처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개편(2008.5.15)하여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구성된 통일부내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기금관리심사반’을 설치하여 기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008.10.10) 및 시행규칙(2008.12.2)을 개정하여 기금지원 용도를 세분화하고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기금집행에 대한 기금환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범위를 확대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18) 등의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민간단체의 기금유용과 단가조작 등을 막기 위해 조달구매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5월말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1월에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발간·배포(2008.11)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기금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

으며, 기금지원 결정 및 사용내역을 통일부(www.unikorea.go.kr)와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실적 |
|-----------------|---|
| 기본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원칙 수립 |
| 기금지원 심의기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 (4인 → 5인) ○ 사전 심의기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심사반」(한국수출입은행)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관련부처 국장급) 신설 ○ 기금지원 심의절차 강화 (2단계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심사반」(수출입은행)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 기금 지원·집행 원칙 구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지원관련 법규정 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2008.10) 및 시행규칙(2008.12),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2008.12) -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 등 ○ 기금지원 민간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2008.6) |
| 대국민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승인·집행실적의 통일부·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2008.4) ○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배포(2008.11) |
| 민간단체 기금 사용 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민간단체 대상 통일부 감사 실시 (2008.11~12월) |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5.7.12)에 의거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원, 자문, 기타 편의 보장과 남북사이의 교역·투자 관련자료 제공 등을 통해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협회사무소)를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개소하였다.

2008년 2월 29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이하 협회사무소)로 개칭되었다. (「통일부 직제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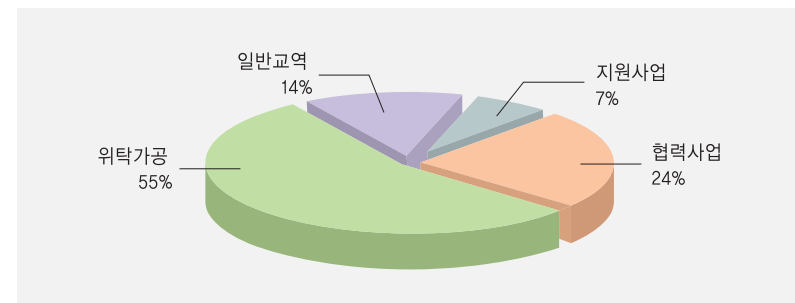
1. 대북 민간경협 지원

남과 북은 협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그동안 중국 단둥에서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되던 「의류위탁가공상담회」를 2006년부터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기업간 사업협회가 개성 협회사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교역과 IT·전기·전자분야의 사업 등도 대부분 개성 협회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협의,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협회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북기업간에는 총 1,284회의 사업협회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남한에서는 4,108명, 북한에서는 3,686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남북간 사업협회의 및 참석인원 현황

| 연도별 | 사업형태별 협의건수(건) | | | | | 참석인원(명) | | |
|------|---------------|------|------|------|-------|---------|-------|-------|
| | 위탁가공 | 협력사업 | 일반교역 | 지원사업 | 계 | 남한 | 북한 | 계 |
| 2005 | 13 | 16 | 9 | 5 | 43 | 160 | 111 | 271 |
| 2006 | 222 | 131 | 69 | 24 | 446 | 1,396 | 1,149 | 2,545 |
| 2007 | 316 | 94 | 64 | 36 | 510 | 1,540 | 1,386 | 2,926 |
| 2008 | 156 | 64 | 46 | 19 | 285 | 1,012 | 1,040 | 2,052 |
| 합 계 | 707 | 305 | 188 | 84 | 1,284 | 4,108 | 3,686 | 7,792 |

2005~2008년 사업형태별 구성비



또한 남한기업의 대북사업 제안, 북한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가공 제품의 작업진도 파악 및 제품선적 확인 등 다양한 문건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한기업들의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협회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과 북은 총 2만 2,203건(남: 1만 1,059건, 북: 1만 1,144건)의 문건을 교환하였다.

2006년 5월 4일 남북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종래 남한기업이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하던 견본을 개성을 통

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과정에서 수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견본을 육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송달은 물론 송달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과 북은 총 1,393건(남: 577건, 북: 816건)의 견본을 교환하였다.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장면(협의사무소)

나아가 협의사무소에서 남북기업 실무자간 활발한 기술협의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당국인원 철수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개성 협의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민간기관 파견자 등이 대북 민간 경협사업 지원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에도 남북 기업간 사업협의 285건, 문건중개 1만 1,630건, 견본송달 686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대북 민간경협사업 지원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기업들이 중국 단둥 등 제3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의사무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도별 대북 민간경협 지원실적

| 연도별 | 사업협의 | 문건중개 | 견본송달 |
|-------|-------|--------|-------|
| 2005년 | 43 | 27 | 1 |
| 2006년 | 446 | 3,221 | 222 |
| 2007년 | 510 | 7,325 | 484 |
| 2008년 | 285 | 11,630 | 686 |
| 합 계 | 1,284 | 22,203 | 1,393 |

2. 협의사무소 인원 철수

북한은 2008년 3월말부터 우리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남비난을 개시하였다. 3월 24일에는 협의사무소 직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우리측 협의사무소 근무인원 중 민간기관 파견자 4명(한국수출입은행 1명, 한국무역협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한국무역진흥공사 1명) 등을 제외한 당국인원 11명에 대해 3일 이내 철수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 입장을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주장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체류합의서」 위

반임을 지적하면서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의 문서요구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2008년 3월 27일 당국인원 11명이 철수하였으며,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협의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8년 11월 24일 우리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우리측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부정하고 대결정책을 추구” 한다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협의사무소를 폐쇄한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측은 2008년 11월 28일 청사 주요시설을 봉인조치하고 컴퓨터 등 주요물품과 문서를 국내로 반출하였으며, 시설관리인원 2명을 제외한 민간기관 파견인원은 모두 철수하였다.

3.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당국인원 철수 및 협의사무소 기능 정지에 따라 대북 경협사업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북 경협사업자의 애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의류임가공, 농수산물, 지하자원, IT·전기전자, 경공업 등) 간담회를 28회 개최하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남북 민간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북 경협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지방순회 대북 경협설명회 장면

2008년도 협의사무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

| 일 자 | 주 요 행 사 명 |
|-------------------|-----------------------------------|
| 4,23 | ○ 의류분야 위탁가공 교역설명회 개최(서울) |
| 6,5~6,20 | ○ 2008년도 추동북 의류위탁가공 상담회 개최(개성) |
| 9,24/ 10,15/ 11,4 | ○ 지방도시 순회 대북경협 설명회 개최(부산, 광주, 대구) |
| 10,28 | ○ 협의사무소 창립 3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 개최(서울) |
| 11,11~11,19 | ○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업무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 4월 ~ 12월 | ○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